투데이 칼럼

북한의 버티기 경제

정 복 규
논설위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대동란이라고 하면서 극복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자력갱생 구호 아래 건설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평양 화성지구의 1만 세대 주택 건설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아파트 건설은 주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 성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속에 북한의 경제 활성화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북한은 경제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각한 봄 가뭄 탓에 대규모 인력 투입이 절실했던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6월 초만 해도 농촌 지역 발열자가 유독 줄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국의 모내기 작업을 90%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식량 위기가 전면화 되거나 계획 경제가 마비되면 체제에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5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다. 이런 의지를 반영하듯 8차 당 대회 폐막 닷새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집행에선 경제 건설 부문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 규모를 확대할 여력조차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경제성과를 원했다.

그래서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건설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1년에 1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주택을 평양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실제 올해 4월,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앞두고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주택 준공식을 열고 대대적인 성과로 선전했다. 비상 방역을 선포한 지금도 북한은 건설 분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식수까지 한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도 현장을 찾아 건설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자재 공장들도 화성지구 물품 조달에 총력을 다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건설 사업에 투입한 군인 수만 명에게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의 대변인도 북한이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신 효과에 회의적이던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건설 분야에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모내기, 김매기 등에 온 힘을 쏟곤 있지만 농업 부문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4월 북한의 중부지역 일대에 발생한 가뭄은 5월 말 북부지역인 함경도까지 확대됐다. 비료 수입도 전년 대비 20% 수준에 그쳐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주민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편을 드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이 단기간에 체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떻게든 경제 성장 동력을 내부에서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30년 넘게 체제를 유지했다. 그런 만큼 자력갱생을 통해 어떻게든 버티며 위기에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경제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제재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도 마비되지 않을 정도의 비효율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로 유지됐다.

지금 국경 봉쇄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이다. 북한은 코로나19를 유례없는 엄혹한 시련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 계획은 무조건 완수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빈치아에 미사일 공격 80여 명 사상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빈니차에서 구조대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 포함, 최소 2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대통령, 싱가포르서 이메일로 '사임'

14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시민들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앞서 분노한 시위대를 피해 몰디브로 도피했던 라자팍사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 도착, 이메일을 통해 사임했다.

사 설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이다. 지방대 위기는 우선 학령인구 급감에서 오는 신입생 미충원 문제다.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해마다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 충격은 지방대학에 더 크게 다가왔다.

실제로 지난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4만586명의 75%인 3만458명이 비수도권 소재 지방대학에 집중됐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여건의 악화도 문제다. 대학의 위기에 더해 지역 소멸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청년 인구가 대거 지역을 떠났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은 교육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주거·의료 여건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했다.

지방대학과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지역 인재 양성에서부터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과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이 긴밀하게 소통해 가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대학과 중앙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지방대학 정책의 청사진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지방대학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단위 공업단지다. 1950년대부터 첨단 기술 업체들이 몰려들어 컴퓨터와 인터넷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실리콘'이라는 이름은 컴퓨터 회로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기본 재료인 실리콘에서 나왔다. 1950년~1980년대에 전자·컴퓨터 산업 분야의 기업체와 공장들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이곳은 1959년에 1만 8,000명의 첨단 기술자가 필요했다. 1971년에는 11만 7,000명이 필요했고, 1990년에는 26만 8,000명이 필요했다. 그 뒤에도 많은 해외의 인재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2000년 이후 이 지역 평균 소득은 미국 다른 대도시 지역의 두 배 이상이었다. 2000년 이후 장기 경제 불황이 미국 전역을 덮었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과 투자가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으로 남았다. 이곳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등이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도 풍족하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만들어 내는 모든 일렉트로닉 산업이 실리콘밸리에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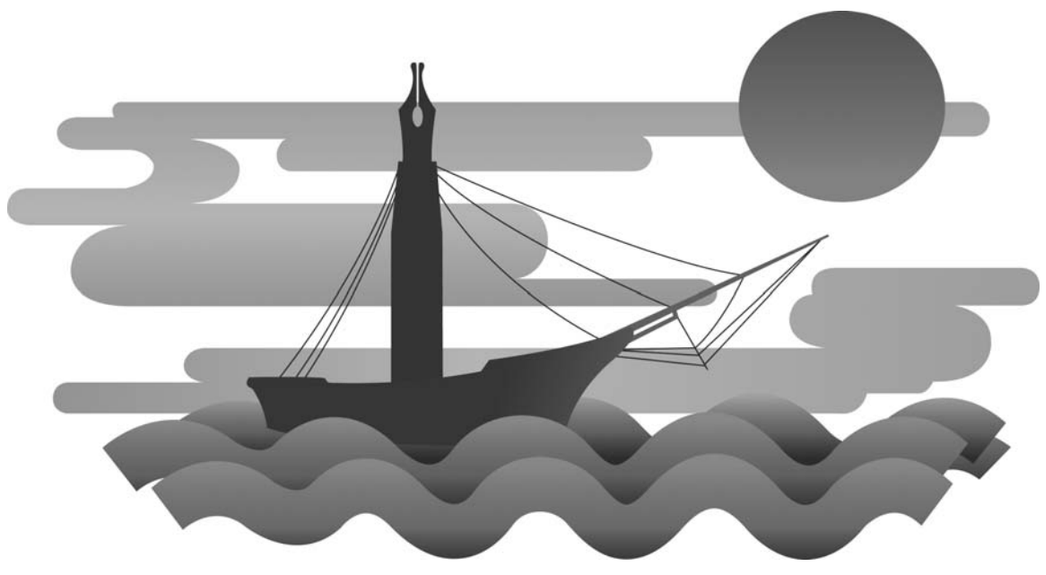
파이어차일드사·인텔사 등의 반도체 기업, 휴렛패커드사·애플사·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컴퓨터 관련 기업이 있다.

최근 국내 어느 대학에서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실리콘 밸리의 조건, 도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시민을 포함한 주체 간의 역할, 특화산업 지원 및 혁신생태계 구축 등 논의가 펼쳐졌다.

한국형 실리콘 밸리의 건설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당연히 등장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